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3. 9. 18.(월) 10:03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동관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2인)

불참위원 : 없음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3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동관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표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두 분 중 두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박동표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동관 위원장
 - 2023년도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이동관 위원장
 - 그럼 2023년도 제31차, 제32차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이동관 위원장

-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동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의결안건 가>, '처분당사자의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과 <의결안건 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에 관한 건'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 보고안건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이동관 위원장

- 오늘 안건 중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이 보고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심각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생산·유포되고 포털, SNS, 방송 등을 통해 확산되어 긴급하고 중대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나아가 국기문란으로까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가 시대 변화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AI 기술 등을 활용한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뉴스 대응에 한계가 있고,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한 사각지대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out)'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해 가짜뉴스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법제도 개선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현행 가용 가능한 시스템을 활용한 이른바 '패스트트랙(Fast Track)', 즉 신속 심의·후속 구제제도 원스톱 처리방안을 우선 가동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할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 미래 세대에 이를 물려주기 위한 사회적 조치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보고안건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7. 보고사항

가.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 이동관 위원장

- <보고안건 가>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종원 혁신기획담당관

-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입니다. 포털, 유튜브 및 방송을 통한 가짜뉴스 확산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고 자유 민주주의 존립과 미래 세대의 삶을 위협함에 따라,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9월 4일 위원장님께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표명하시고, 9월 6일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9월 13일에는 '가짜뉴스 근절 TF' 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같은 날 포털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추진방안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짜뉴스 신속 심의 및 구제제도, 일명 패스트트랙 활성화입니다.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여 신고 접수→신속 심의→구제조치를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신속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포털 사업자와 공유하고 심의 대상 중대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선제적 자율규제 등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대상 중대한 가짜뉴스는 긴급한 재난상황,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이나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융시장 등에 심각한 혼란 유발, 선거 결과에 영향 등이며, 선제적 자율규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게시물에 가짜뉴스 관련 심의 중임을 알리는 정보 표시, 임시조치 등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터넷신문사의 보도는 언중위로 안내해오던 방심위의 기존 관행을 개선하여 방심위 자체 심의를 추진하는 통합심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짜뉴스에 대한 방심위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가짜뉴스 정의 및 판단기준, 서면심 의 대상에 포함 여부 등 입법사항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입니다. 지상파방송, 종편·보도PP를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계획'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과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재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을 개편하여 기본적으로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되,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현행 3년보다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전과법 시행령 및 방송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허가·재승인 심사 평가를 계량평가 중심으로 전환하여 심사의 객관성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포털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입니다. 사업자 자체 팩트체크 자율규제 체계를 확립해 사업자 스스로도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의 뉴스서비스 인위적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서 실태점검 중이며, 금지행위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위법 사실 입증 시 과징금 부과, 시정조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털, 해외 플랫폼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 대응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평위 운영내역 공개, 뉴스 알고리즘 검증체계 마련 등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기타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입법지원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가짜뉴스 근절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자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하여 관련 사업 담당 과장들을 반원으로 구성하고, 방심위 등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는 TF를 운영하되, 가짜뉴스 전담팀 구성 등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TF는 가짜뉴스 대응체계 구체화 및 실행방안 논의 등을 통해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가짜뉴스 정의 및 판별기준, 방심위 심의제도 개선 및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가짜뉴스 대응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보완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짜뉴스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지원과 함께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협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9월부터는 가짜뉴스 신속 심의 및 구제제도(패스트트랙)를 가동하고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이동관 위원장

-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회의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 디지털을 통한 가짜뉴스가 급속히 국민에게 확산·유통되며 우리 사회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근간을 흔드는 가짜뉴스의 피해에 대한 대응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기에 오늘 우리 위원회가 우선 실행 가능한 신속 심의 및 구제제도 도입을 포함해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가짜뉴스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최근 EU에서도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빅테크 등에 대한 가짜뉴스 규제를 강화하였고, 미국은 인공지능을 통한 가짜뉴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추세 그리고 국내 현실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발표 이후 우리 위원회는 TF를 통한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 수립부터 국회 및 언중위, 과기부, 문체부 등 관련부처 간 협의를 통한 관련 법률 제·개정까지 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가짜뉴스 근절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긴급하게 마련된 우리 위원회의 이번 대책이 가짜뉴스를 근절하고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무처의 보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동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제도 개선에 앞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마련된 방안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없습니다.

○ 이동관 위원장

- 그러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보고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방통위를 중심으로 방심위,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들이 모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동관 위원장

- <보고안건 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지현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 개정 이유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플랫폼 자율규제기구 설립·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플랫폼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주요 추진경과입니다. 2022년 7월 6일 범정부 플랫폼 정책협의체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기재부 및 방통위, 과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였습니다. 2022년 7월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TF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에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시범운영하기 시작해서 올 5월에는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 성과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진행하였고, 과기부와 함께 오늘 보고드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자율규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등의 부가통신사업자(또는 그 단체)가 자율기구나 자율규율을 통해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상생협력 등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민간의 플랫폼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플랫폼의 자율규제 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이용자 의견수렴 관련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등의 부가통신사업자(또는 그 단체)가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의 지정 및 철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자율규제를 지원할 수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또는 그 단체)의 요건을 규정하고, 자율규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서 명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규제 인센티브 관련입니다. 방통위 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가통신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과기정통부와 함께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하여 올 연말까지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동관 위원장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이번 법률 개정안은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그동안 논의되어 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플랫폼 사업과 같은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의 과도한 규제는 혁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오히려 빅테크 중심으로 시장 독과점과 종속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부처 간 논의와 협업을 통해 마련된 이번 자율규제의 근거가 이런 향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상생과 협력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시장 환경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플랫폼상에서의 이용자 차별과 불편 그리고 불공정 문제는 여전하며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간을 갖고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사후 규제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 이후 사무처에서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이번 법률 개정 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보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동관 위원장

-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없습니다.

○ 이동관 위원장

-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비공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16분 】

6. 의결사항

가. 처분당사자의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2023-33-099) (비공개)

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에 관한 건 (2023-33-100) (비공개)

【 10시 38분 】

8. 기 타

○ 이동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없습니다.

○ 이동관 위원장

- 그러면,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동관 위원장

- 이상으로 2023년도 제3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39분 폐회 】